계엄군 총탄 실물 전시·3차원 영상으로 5·18 역사 한눈에

내년 5월 복원 끝내고 문 여는 옛 전남도청 무엇이 담기나

복원추진단 전시콘텐츠 설명회
한강 '소년이 온다' 글귀 영상 상영
시민군 복장으로 지프차 타 볼 수도
사체 안치 상무관 추모공간 조성
언론인 요구 검열관실은 빠져

내년 5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문을 여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에는 도청 내·외벽에 박혀있던 계엄군의 총탄이 전시되고 홀로그램 3차원 입체 영상으로 5·18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가 구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2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으로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설명회다.

전시 주제는 '최후 항쟁,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로 확정됐다.

복원추진단은 콘텐츠 차별화 요소로 옛 전남도청 본관 1층에 내·외벽에서 추출한 탄두를 실물 전시한다는 점, 5·18 역사를 다루는 홀로그램 3차원 입체 실감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하는 점 등을 꼽았다.

상무관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글귀가 담긴 영상을 상영하는 점, 도청 내 열사들이 숨진 지점에 추모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점 등도 눈길을 끄는 콘텐츠다.

도청 본관의 경우 부지사실 등 4개 공간을 1980년 당시처럼 복원하고 5개 공간에는 무장 항쟁, 최후 항쟁, 계엄군 탄두, 희생자 이야기 등을 전시한다.

시민군 상황실은 시민군이 이용한 각종 장비와 유인물을 볼 수 있도록 꾸며지고 기획관리실장실은 기동타격대 선서를 읽으며 시민군 복장 체험 등이 가능하다. 내무국장실에서는 보도 통제가 이뤄졌던 당시 상황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도청 본관 외부에는 시민군 기동타격대가 사용한 지프차 등도 설치돼 방문객이 직접 탑승해 볼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도청 2층 강당에는 윤상원 열사 추모 시설 등이 들어서고 지하 1층에는 시민군 무기고를 복원해 시민군이 자체 회수한 총기와 다이너마이트 등을 전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 28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콘텐츠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도경찰국 본관에는 10·26부터 12·12까지 5·18 이전 민주화 전개 과정을 비롯한 5·18의 역사를 설명하는 콘텐츠가 채워진다.

도청 별관에는 역사 전시실, 교육·체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전남도청 건축 과정과 행정 중심지로서 광주시 신축·확장 과정,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변모 과정 등을 소개하는 건축역사실도 들어선다.

시민군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은 상설 추모공간으로 조성된다. 복원추진단은 당초 시민들의 관을 그대로 전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대형 스크린으로 1980년 당시 상황을 상영하고 관을 감쌌던 광목천을 스크린 위로 늘어뜨리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철거됐던 상무관 내부 2층 관중석 등도 복원될 예정이다.

재건축으로 원형을 잃은 수위실도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되며, 무기 회수와 관련된 전시와 사상자 확인 위해 출입을 제한했던 서사를 전시한다.

1980년 당시 해직당했던 언론인들이 요구한 '도청 별관 언론검열관실 복원'은 예산 확보 및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서 복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개관 시점은 복원 관련 증거 자료를 반영하는 과정, 오는 9월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5월로 잡혔다.

복원추진단은 내년 1월까지 건설공사와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까지 장비·프로그램 테스트 기간을 거쳐 시범운영(4월)을 거쳐 5월에 개관할 계획이다.

한편 옛 전남도청이 지난 1999년 무안군으로 이전된 뒤 해당 부지에는 2004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들어섰다. 이달 기준 건설공사 공정률은 57%, 전시콘텐츠 설계 용역 공정률은 27%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계적 미슐랭 스타 셰프들, 담양에 모인 까닭은?

남도 명인·명장 종가 미식클래스
전통 장 담그며 독창적 음식 모색

담양으로 세계적인 스타 요리사들이 집결했다. 전남 전통 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과 장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보면서 독창적 맛의 가치를 반영한 음식 관광 콘텐츠 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8일 담양 기순도 전통장체험관에서 열린 '남도 명인·명장 종가 미식클래스'에는 기순도 식품 명인을 비롯, 국내외 유명셰프 13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프랑스 출신의 미슐9랭 3스타를 받은 프레데릭 안톤과 미슐랭 1스타 장 프랑스와 후케트, 벨기에 요리사로 미슐랭 3스타인 게르트 드망리에, 싱가포르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3스타 경력의 토라익 츄아. 기순도 명인과 전통 장을 직접 담가 보면서 제조·발효 과정의 독창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8명의 해외 셰프 외에 국내 유명 셰프인 최해영(전 미슐랭 1스타) 등 5명의 국내 셰프도 함께 했다.

28일 담양 기순도 전통장체험관에서 기순도 명인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 장 담그기를 체험하고 있는 해외 유명 요리사들. 〈전남도 제공〉

전통 장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보고 맛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목포과학대 식품영양학과 학생 등도 스타 셰프와 함께 전통 장을 담그는 색다른 체험을 했다.

'남도 명인·명장 종가 미식클래스'는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남도 미식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미식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싱가포르 출신 토라익 츄아 셰프는 "전남의 전통장은 콩의 깊은 풍미와 발효 과정의 우아함이 어우러지면서 특별한 맛을 낸다"고 평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오는 10월 목포 일대에서 열리는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통해 '전남 K-푸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방 7급 공채 국어, 공직 적격성평가로 대체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며,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2차 과목 필기시험·3차 면접시험)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준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 방식도 조정한다.

/연합뉴스

의협, 의대 증원 국민감사 청구…"졸속 추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행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부회장 등은 이날 회원 653명의 서명을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지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은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